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8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2월 14일 (음력 1월 8일) 목요일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선거법에 발 묶여 서민 행정 올스톱

지하철 개통식 등 줄줄이 연기·취소

"선거가 뭐길래 시민의 발까지 묶나요."

광주 지하철 1호선의 완전 개통이 총선 뒤로 미뤄지는 등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지난 9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주민편익을 무시한 채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3월 27일께 개통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의 개통식을 총선일인 4월 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하철 개통식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시 선관위는 시가 지하철 개통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금지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시에 보냈다.

당초 시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등 600여명을 초청해 개통식을 갖고 현재 1구간만 운행중인 1호선에 2구간까지 더해 광주지하철 1호선(20.1km)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었다.

개통식과 지하철 운행이 총선 이후로 늦춰지자 시민들은 "6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 2구간 운행을 총선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 측은 "굳이 개통식을 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운행 자체에는 문제될 게 없으므로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도 지난 9일부터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이 일체 금지되자 각종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매년 2월~3월께 관내 336곳의 경로당 새해 인사를 다녔으나 올해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총선 이후로 미뤘으며 임동 '일신방직 담장 허물기사업' 준공식 행사는 전면 취소했다.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도 매년 초 17개 동(洞)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이미 다녀온 7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은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순천시는 매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순천사랑아카데미'의 2~3월 중 행사 참여 대상을 직원들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선심성 행사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상 행정행위까지 선거와 연결짓는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관행적으로 해온 단체장 시상때 상품 하나 제대로 줄 수가 없다"며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되레 주민 불편과 행정적·경제적 낭비를 부를 수 있어 탄력적인 적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농진청 폐지 말라" 장흥지역 농민 1천여명이 13일 장흥 탐진천 부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남지역 19개 시·군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동시 다발 집회를 열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직개편안 대치…정국 경색

전남 농업인 1만여명 "농진청 폐지 반대" 시위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가칭)이 정면대치를 계속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막판 대타협의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간의 전화접촉에서도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아 새 정부의 파행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13일에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구여권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통합민주당(가칭)은 "여론몰이 정치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수부, 여성부,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처여서 관철시키려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현재 ▲장관을 특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15명을 임명하는 안과 ▲통폐합 부처 4개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과 특임장관 등 15명을 임명하는 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법무부 등 4~5개 부처만 먼저 조각하는 순차조각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 측근은 "통합민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15일께 정국돌파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 해남 등 전남지역 19개 시·군 농업인 1만여명은 13일 장흥 탐진강변 등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 지역갈등 새 불씨

J프로젝트·새만금 등 사업 중복
낙후지역 지원 불이익 받을수도

새 정부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권역별로 개발하기로 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지역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로 추진될 경우 재원배분, 권역내 중복사업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을 불러 광역경제권과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핵심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추진기구의 경우 "광역경제권별 지역본부체제를 광역경제권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사업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재원조달은 기존 균특회계(7조5000억원)에 추가 지원해주는 방향의 광역경제권 골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이 이미 같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북을 붙이면, 자칫 지역갈등이나 사업축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돼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별 연계·조정 등을 거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은 또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연간 1조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신설되는 '광역경제권특별회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합해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건의했다.

광역경제권 본부 역할과 관련, 자치단체들은 위상약화를 우려해 예산배분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선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처럼 예산배분권은 물론 사업 집행권까지 줘야 광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숭례문 방화' 채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 단독범행 결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3면〉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판사의 심리를 거쳐 영장의 발부 여부는 14일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씨는 경찰에서 "주거지가 재건축될 때 시공사가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지자체와 대통령 비서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았들여지지 않았다. 창경궁 방화사건에서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생돈 1천300만원을 내게 됐다"라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경찰은 채씨의 자백,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근처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 ·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사표를 오는 22일께 수리키로 하고, 그 시점까지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매진토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